

구멍난 영광원전... 눈 감은 지역 정치권

타지역 의원·기관에서 문제점 밝혀내 쟁점화

지역 국회의원들 소극적 태도... 지역민 '눈총'

검증서 위조 부품이 사용돼 가동이 중단된 영광원전 5.6호기에 이어 정비 중인 3호기에서 핵심 부품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영광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지역 정치권이 한발 늦은 대응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지역민들은 영광원전의 잦은 고장도 사고, 납품비리 등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있따라 드러났고 최근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지역정치권이 아닌 다른 지역 의원들이나 기관에서 문제점을 밝혀내는 등 지역정치인들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영광원전 3호기 부품의 결함문제도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통합당 유은혜 의원의 지난 9일 폭로로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측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며 쟁점화됐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 지식경제위원과 교육과학기술위원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을 꾸려 13일 영광 현지를 방문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진보정의당보다 한발 늦은 것으로 대선에 몰두하다가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진보정의당 핵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 3월 부품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한수원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김제남·정진후 의원은 이날 영광군청을 방문,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나아가 "한수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다.

지역 의원들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남도당위원장이자 원전의 해당 상임위원 지경위 소속인 유은혜 의원은 지난 7일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한수원 비리사건과 영광 5.6호기 원전가동 정치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지만 정치적인 수사에 그치지 보니 적극적인 조사나 대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핵안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영광원전을 방문, 발전 정치 현황과 원인 등에 대해 듣고 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원전 5·6호기에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공급된 사실을 지난 3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해당 지역구의 이낙연 의원도 비록 상임위가 다르긴 하지만 영광원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당 차원의 대응이 늦어지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해당 상임위원 지경위 대신 교과위가 긴급현안질의에 나섰고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이 영광원전 3호기 부품의 결함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야당 의원만 참석할 당시 긴급 현안질의에서 유 의원은 김근섭 한수원 사장에 "이번 현안질의를 준비하면서 영광3호기 제어봉 안내관 84개 중 6개가 손상된 사실을 알게됐다"며 "현안질의의 기회가 없었으면 내부보고만 하고 끝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연 의원은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부품 납품과

관련,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도 한수원이 지식경제부에만 보고하고, 안전규제기관인 위원회에는 지경부보다 11일이나 지체해서 보고했다"며 "위원회 스스로 안전규제기관이라는 자각을 못하고 문제가 생겨도 안전하다는 홍보만 하다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관련,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도 한수원이 지식경제부에만 보고하고, 안전규제기관인 위원회에는 지경부보다 11일이나 지체해서 보고했다"며 "위원회 스스로 안전규제기관이라는 자각을 못하고 문제가 생겨도 안전하다는 홍보만 하다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동구청장 보선 후보 1차 컷-오프 8명 오늘 발표 최종후보 여론조사로

민주당의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1차 컷-오프 결과가 12일 발표된다. 민주당은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 내에 경쟁력 조사 등을 토대로 2차 컷-오프를 실시, 3명 이내로 경선 후보자를 다시 압축한 뒤,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공심위(공직후보자추진심사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 열고, 12명의 동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1차 컷-오프 심사를 진행했다. 공심위는 1차 컷-오프를 통해 예비 후보를 8명 이내로 압축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 내에 경쟁력 조사 등을 토대로 한 심층 평가를 실시, 3명 안팎으로 후보를 다시 압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컷-오프를 통과한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국민참여경선을 실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동구청장 보궐선거가 지난 4·

11 총선에서 선거인단 모집 과정의 투신 자살 사태로 인해 치러진다는 점에서 국민참여경선은 선거인단 투표보다는 여론조사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동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에나 선출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공심위는 경선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경남지사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은 11일 마감되는 공모 상황을 지켜본 후 전략공천이나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 원서접수: 11. 12(월)~30(금)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원전 정보 주민들은 몰라도 돼?

폐쇄적 구조 사고 키워... 안전감시·정보공개 시스템 재정비 시급

납품비리에 미검증 부품은 물론 최근 영광원전 3호기 제어봉 안내관 균열 등 원전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재의 안전감시 및 정보공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원전의 안전 감시 기능 및 정보공개가 지나치게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자의적인 판단에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영광원전 등에 따르면 현재 영광원전을 비롯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나 고장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2-85호'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고시는 방사선 누출 등의 사고와 함께 불시 고장 등 30

여개 항목에 대해 상부에 구두 보고한 뒤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영광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와 언론에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발견된 결함 등은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3호기 원자로 헤드의 관통관 6개에서 발견된 결함은 정상적인 정기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보고·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은폐 의혹을 일축했다. 통상적으로 18개월 주기의 핵연료교체 기간에 진행되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에 드러난 '통제 가능한 위험'으로 사고가 아닌 고장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하지만 원전민간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공개에 대상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광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관계자는 "국내 원전에서는 처음으로 원전 핵심시설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전 단계와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번 사안은 국내 원전 산업의 폐쇄성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현재 시점에서 원전의 운영·감시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고장·사고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9일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운영위원인 정규필(53)씨가 영광원전 정문 앞에서 국제적 수준의 안전진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영광원전 5호기 다음달 5일 가동

미검증 부품 교체 작업으로 가동이 중단된 영광 5·6호기 중 5호기가 이르면 다음달 5일부터 가동이 재개될 전망이다.

제어봉 안내관 균열 정비와 미검증 부품 교체 때문에 연말까지 영광 3·5·6호기가 발전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기라도 내달 초 발전을 재개하게 되면 동절기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영광 3·5·6호기는 발전 용량이 각각 100만kw급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1일 영광원전 5.6호기의 재가동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교체 필요 품목 201개 중 193개에 대한 구매 계약을 마쳤으며 해당 부품이 25일부터 입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나오노니 한숨이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더 행복하게!

■ 경제적 이익

- 재해예방으로 관련 손실비용 최소화
- 재해위험에 대한 선별 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예산 감소
- 안전보건 행정업무 통합·간소화

더 안전하게!

■ 정부의 혜택

- 인정 사업장 감독 면제
- 보험요율제를 통해 기존 산재보험료 절감
- 면책과 과태료 완화 등으로 벌칙성 소모 경비 경감

더 건강하게!

■ 재해예방·감소에 따른 부대효과

- 노동인력 보존과 생산성 향상
- 사업장의 능동적 분위기 조성
- 유대감 강화
- 기업 인지도 상승으로 부가가치 창출

●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건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여 개선·재검토하는 순환과정을 반복적·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2013년 전면시행**
▶ 2010년~2012년 3년 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 전면 시행 예정
▶ 2012년은 22개 지방고용청(지청)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절차·지원사항**

<p>1 참여신청 사업주 → 노동관서</p> <p>· 무상교육(실습 위주) · 평가 매뉴얼 등 관련자료 제공</p>	<p>2 교육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p> <p>· 워크숍 실시 · 무상교육(실무 위주) · 실행서약서 작성</p>	<p>3 이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 노동관서</p> <p>· 6개월 점검 면제 · 재정지원 등 무상지원 · 교육·정보자료 지원 · 예비인정</p>	<p>4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재정 지원</p> <p>· 공동 시범평가 지원 · 컨설팅(지도) · 관련정보 제공</p>	<p>5 이행 수준 확인 사업장 → 노동관서</p> <p>· 인정서 발급 · 24개월 감독 면제</p>	<p>6 반복 시행 주기적 반복 시행</p> <p>· 기술·교육·정보자료 등 사업주 요청 필요 내용 지속 지원</p>
--	---	---	---	---	---

2013년 위험성평가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기분좋게, 먼저 시작하세요!

참여신청·문의(Tel)

안전보건공단 : 서울지역본부 (02)828-1632	서울북부지도원 (02)3783-8311	경인지역본부 (032)570-7253
부천지도원 (032)680-6517	경기남부지도원 (031)259-7127	경기서부지도원 (031)481-7516
경기북부지도원 (031)828-1913	강원지도원 (033)815-1011	대전지역본부 (042)620-5613
충북지도원 (043)230-7124	충남지도원 (041)570-3423	부산지역본부 (051)520-0529
경남동부지도원 (055)371-7521	경남지도원 (055)269-0563	대구지역본부 (053)609-0524
경북동부지도원 (054)271-2031	광주지역본부 (062)949-8776	전북지도원 (063)240-8532